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과 의사소통적 권력: 온라인 심의적 참여 연구의 분석틀

류현숙(한국행정연구원)

I. 서론

이 글은 전자정부 주도의 전자적 참여, 즉 온라인 참여·심의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TCA), 이상적 발화 상황(Ideal Speech Situation, ISS), 의사소통적 권력(Communicative Power, CP)의 개념들을 도입한다. 하버마스의 개념을 빌려온 주된 목적은 ‘최근의 온라인 참여 경험의 이상적인 대중 심의와 정책적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하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물음은 온라인 참여를 통한 참여의 폭과 질, 정책변화의 정도와 이를 둘러싼 수사학적인 과장(rhetoric)과 실재(reality)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질문은 구체적 사례 연구를 통해서만 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경험적인 분석틀과 특정한 분석적 방법을 필요로 한다. 한마디로, 한국의 전자정부가 주도하는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의 평등성, 심의성, 그리고 정책효과들을 측정하기 위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과 의사소통적 권력 개념들이 도입될 것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상 정치적 담화들의 심의성과 온라인 참여의 정책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론적 담론에 비해 경험적 연구와 분석틀에 대한 고민은 매우 뒤쳐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까닭에 정보기술 및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 분야에 도입된 하버마스의 개념은 종종 이론의 모호함과 이 분야 연구에 있어 실제적인 유용성을 제공하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Cecez-Kecmanovic와 Janson 1999; Wilson 1997). 또한, 의사소통행위이론의 활용이 이론 자체나 실제 적용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나 비판 없이, 단순히 연구 방법상의 편의를 위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활용되었다는 비판도 있다(Brooke 2002; Valero-Silva 2001). 그럼에도 불구하고 Sproull과 Kiesler(1991)처럼 하버마스 이론에 대한 주도면밀한 탐색과 함께 자신들의 경험적 연구들에 하버마스의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적용한 이들도 있다. 이들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하는 의사소통 기술들이 “서

구식 민주주의의 이미지와 놀랄 만큼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연구들은 온라인 토론과 의사결정 절차의 심의적인 질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규범적 조건들을 조작화(operationalize) 하는데 집중하였다(Spörndli 2003; Wilhelm 2000; Winkler 2002). 이 논문에서는 하버마스의 담론 이론의 주요 개념들이 어떻게 분석을 위한 구체적 평가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II. 의사소통이론, 이상적 발화 상황, 의사소통적 권력

사회진화(social evolution)의 비판이론으로 등장한 하버마스의 초기 연구들은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사소통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권력에 대한 이론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그의 이론들과 다양한 주제들이 모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제나 개념들을 분리해서 이해하기란 쉽지 않지만, 하버마스의 진화이론과 그의 의사소통이론 사이에서 대략적인 선긋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Outhwaite 1994: 50).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1984, 1987)이 베버, 뒤르카임, 마르크스, 루카치, 아도르노, 파슨스와 같은 사회이론가들에게 크게 영향을 받은 사회이론 연구라고 밝힌다(McCarthy, 1984:vii). 의사소통행위이론은 일련의 주제들이 전체 이론을 관통하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몇 개의 논제들로 요약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논의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a) 생활세계와 체계의 구분을 통한 현대사회의 병리 진단; (b) 의사소통 행위와 전략적 행위의 구별; (c) 다양한 형식의 논의들을 통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는 타당성의 요구들(claims)을 통해 걸러진 이상적 발화 상황과 의사소통의 합의를 통해 얻어진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개념, 그리고 (d) 세계연관과 생활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의사소통 모델(Honneth and Joas 1991: 2)로 분류될 수 있다. 한마디로, 의사소통행위이론은 인간의 행위와 이성을 단순히 도구적 또는 전략적으로 설명하려는 사회이론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Honneth and Joas 1991; Outhwaite 1994).

의사소통행위이론은 규범적 의사소통모델이 어떻게 심의(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적 고찰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실용주의적 관심과 연계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에 반하여 하버마스 후기 저작인 ‘사실성과 규범성(Between Facts and Norms, 1996)’은 규범적 의사소통모델과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연결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의사소통행위에 대한 형식이론이 법과 민주주의라는 복잡한 사회제도에 실제로 어떻게 연계되는가에 대한 고찰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의사소통이론을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조정(social coordination) 현상에, 구체적으로는 근대 입법(law-making)에 처음으로 적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Rehg 1996: xxiv). 하버마스(1996)가 자신의 의사소통이론을 의사소통적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킨 것은 초기 의사소통행위이론이 복잡한 제도적 상황을 등한시하거나 현실 정치 및 인간행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순진한 설명(naive account)’이라는 비판에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 현대사회의 진단: 식민지화된 생활세계

하버마스는 근대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마르크스와 베버의 진단을 염두에 두면서 “체계의 요구들에 대한 생활세계의 종속”이라는 말로 근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표현하고 있다(McCarty, 1984: xxxiii). 하버마스는 대다수 국가의 통치 형태인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는 인간의 행위와 이성인 시장의 논리와 정부 통제에 종속된다고 주장한다(Habermas 1987: 117-118). 현대사회 문제에 대한 하버마스의 진단의 중심에는, 생활세계(Lebenswelt)와 체계(system)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 내에서 생활세계와 체계라는 세계에 대한 두 갈래의 접근법을 2단계 사회 개념을 통해 결합한다. 그는 사회를 행위 경향의 조화를 통해 조정되는 사회집단의 생활세계로서 개념화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동시에 사회는 행위 결과의 기능적인 상호연관성을 통해 조정되는 자기조절적시스템(self-regulating system)으로도 표현된다. 그러나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때는 이 생활세계와 체계를 동시에 하나의 세계로 받아들인다(Habermas, 1987: 118, 131).

이원적 사회개념과 마찬가지로, 하버마스가 제시한 생활세계 역시 생활세계에 대한 해석적인 개념(interpretive notion)과 일상적인 생활세계에 대한 현상학적 개념(phenomenological concept)을 연결하기 위한 이원적 특성을 갖는다. 즉, 생활세계는 사회문화적 행위의 일상적 개념이 구체화되는 내에서 생활에 대해 이미 해석된(pre-interpreted) 일련의 방식들이 배경지식으로서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는 생활세계의 특징들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의 명백한 토대이며, 또한 내가 다뤄야 하는 모든 문제들이 놓여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한 틀”이라고 설명한 쉘츠와 루크만의 아이디어에서 빌려온 것이다(Outhwaite, 1994: 65). 동시에 생활세계는 화자와 청자를 위한 상호작용의 초월론적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활세계는 “문화적으로 전승되고 언어적으로 구성된 해석 양식들(patterns)의 축적으로 대표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Habermas, 1987:124). 간단히 말하면, 생활세계는 본질적으로 인식가능하고 선천적으로 친숙한 문화적 경험과 의사소통적 상호작용들의 초월론적 공간을 모두 아우른다고 할 수 있다.

생활세계의 중심이 언어인 것처럼, 체계에서는 화폐와 권력이 중심이 된다. 화폐와 권력은 도구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와 기능적 이성에 기반을 둔다. 경제와 행정국가의 영역에서 행

위자는 도구적으로 판단한다. 한편,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구적인 추리에 참가하는 다수의 행위자들의 노력은 종종 원래 의도한 바와 다르지만 종종 예측 가능한 체계적 발전을 초래한다(Habermas, 1987:185).

하버마스(1987)는 현대 사회 문제들의 근본적 원인을 생활세계와 체계의 분리에서 찾는다. 체계의 메커니즘이 진화·발전할수록,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때 작용하는 사회적 구조들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현대 사회는 독자적인 조직들이 점점 화폐나 행정권력의 탈규범적 조종(norm-free steering)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체계분화의 단계에 이르렀다(Flynn, 2004: 434). 그 결과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와 행정적인 행위들의 하부체계는 도덕적—정치적 기반으로 부터 이탈되고, 통제 역시 불가능하게 된다. 이 고삐 풀린 기능주의적 이성은 “합의 지향의 의사소통 과정을 생략하고, 다른 참여자들의 결정에 일반화되고 전략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Habermas 1987: 183),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활세계는 체계의 식민지가 된다. 경제적, 행정적 하부 체계에 대한 생활세계의 종속을 하버마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결국 시스템적 메커니즘은 심지어 인간 행위의 합의-의존적인(consensus-dependent)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조차 이러한 사회통합의 방식을 억압한다. 이에 따라, 생활세계의 상징적 재생산이 위협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영역들에서 생활세계의 합병은 식민지화 양상을 띤다(Habermas, 1987:196).”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지화가 초래하는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a. 사적 영역에서, 경제적 노력과 수단의 효능은 금전적 이익에 근거한 재화의 생산 및 교환의 성공적인 도구적 조작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분업에 근거한 인간 상호작용의 직관적인 기준의 역할을 한다. 순차적으로 이것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데올로기들은 자체적으로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구현된 개개인의 선호들을 총합적 공통의 이해(aggregated interest)에 부합시키는 보편적 형태를 띤다는 것을 뜻한다(Outhwaite, 1996).
- b. 경제체계가 사적 영역을 손상시키고 좀먹은 것처럼 행정체계는 공적영역(public sphere)을 약화시키고 좀먹는다. 교환관계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시장 논리는 관련된 모든 경우에(on every relevant occasion), 인간의 상호 작용을 통제하기 위한 권위적인 권력과 결합한다. 따라서 현대 정치는 효율성을 위해 점점 관료제화되고 이는 결국 여론의 자발적인 형성을 억압하고 박탈하고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치적 결정들은 대중

의 의지로부터 상당히 벗어나게 된다(Habermas 1984a). 이에 상응하여 정치의 영역은 대중의 이성(public reason)이 아닌 관료제의 영역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정당성은 합리적 이성 에 기반을 둔 정당화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권력의 명령을 실제로 (de facto) 수용하느냐의 문제로 변질된다.

- c. 사적 영역과 공적영역에 대한 관료권력과 시장의 침입은 나아가 의사소통행위와 의사소 통 합리성의 침식으로 이어진다. 화폐나 권력과 같은 매체는 어림 가능한 가치의 양에 대 한 합목적적인 태도를 암호화하고, 합의 지향적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다른 참여자들의 결정에 대해 일반화되고 전략적인 행위를 하게 한다. 설령, 의사소통행위가 가 능하다할 지라도 이는 곧 화폐와 정부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이용된다. 따라서 이때의 생활 세계는 더 이상 행위의 조정을 위한 장이 아니며, 경쟁의 장, 나아가 상벌에 대한 상징적인 일반화의 방향으로 전개된다(TCA vol. 2:183).

위에서 언급한 증상은 현대사회와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legitimacy)의 위기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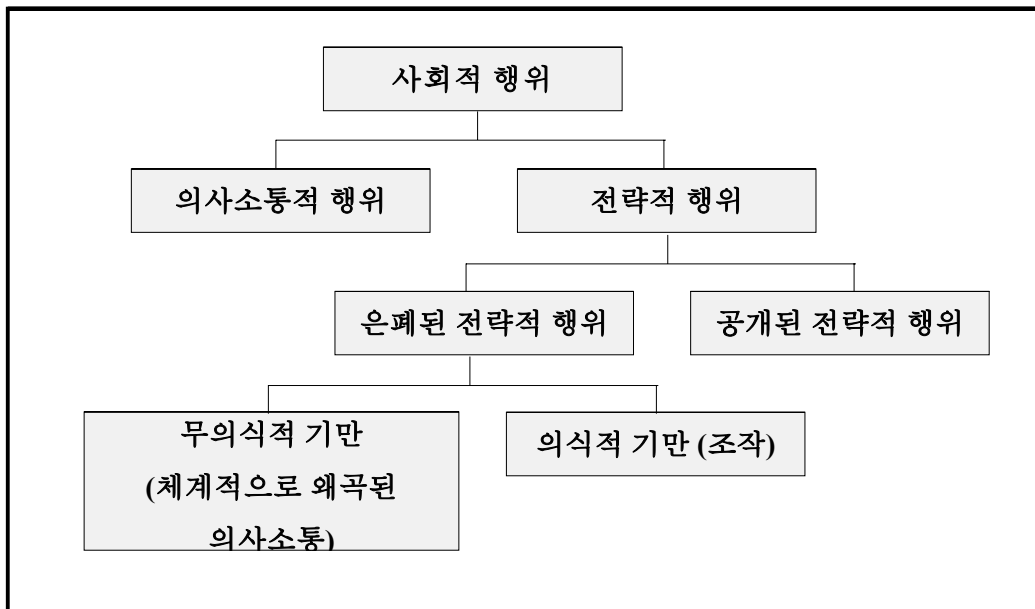
2. 대안(對案)으로서 의사소통행위

하버마스는 생활세계에 대한 체계의 우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합목적적(purposive and rational action) 행위로부터 생활세계의 의사소통행위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 생활세계가 체계를 대체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하버마스는 해방의 합리화(rationalization of liberation)를 기능주의 이성과 대조적으로 의사소통행위에 잠재되어 있던 합리성의 연속적인 해방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Habermas 1987: 155). 따라서 합목적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의 구분은 의사소통행위이론의 핵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버마스(1984: 334)는 사회 행위의 유형을 목적론적 행위(teleological action), 의사소통적 행위(communicative action), 규범에 의해 규제되는 행위(normatively regulated action), 극적 행위(dramaturgical action),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목적론적(전략적) 행위와 의사소통행위를 구분한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합리화 과정은 의도적(purposive) 합리성, 기교와 이해타산, 조직과 행정의 지배로 나타난다. 경제력과 관료행정의 승리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양식을 지배한다. 이런 도구적 이성(instrumental reasoning)을 바탕으로 인간의 행위는 전략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하버마스는 이런 “합목

적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행동”을 목적론적 행위(teleological action)라고 부른다. 목적론적 행위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지배적인 철학적 이론이다. 이러한 행위개념은 행위자의 결정이 행위원칙과 상황해석을 길잡이로 삼은 목적의 실현에 기반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ibid: 85). 목적론적 행위모델은 한 명 이상의 목표지향적으로 행위하는 사람들이 다른 행위자의 결정에 대해 예측하면서 전략적 행위모델로 확장된다. 이 행위모델은 종종 공리주의적으로 해석된다. 행위자는 의도적으로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수단과 목적을 선택하고 산정(算定)한다. “경제학, 사회학, 사회심리학에서의 의사결정이론 및 게임이론적 접근들의 기반”이 바로 이 행위모델을 기반으로 삼는다(ibid: 85).

〈그림 1〉 기본적인 사회적 행위



(출처: Habermas, 1984: 333)

하버마스는 도구주의적 이성과 기능주의적 합리성으로부터 생활세계를 지키기 위해 근대철학과 사회이론의 주관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명제들에 의존하지 않는 의사소통행위라는 개념을 가져온다(McCarthy 1984; Outhwaite 1994). 목적론적 행위와 대조적으로 의사소통적 행위는 “언어와 행위능력이 있으면서 서로 관계를 맺는 둘 이상의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련한다(Habermas 1984a: 86). 즉, 행위자들은 각자의 행위계획과 행위를 여럿이 합치한 공동의 의견 아래 조정하기 위해 행위 상황에 관해 상호이해를 추구한다. 이때 행위자간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해석(interpretation)이며, 이는 특정한 상황을

이해하고 정의함에 있어 관련된 행위자들 간의 협의를 뜻한다.

합리성과 행위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이분법적 구분은 순수하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하면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서 반영된다. 하버마스는 이런 언어를 “언어-사용(language-use)”의 일차적 사례이자 “인간 발화의 내재된 궁극적 목적”으로 보았고, 전략적 혹은 성공지향적 발화를 언어에 기생하면서 숨겨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방향을 조작하는 것으로 보았다(Outhwaite 1994: 45-46).

하버마스(1984a)는 언어를 통해 하나의 사회현상을 이해하려면 의사소통적 합리성(communicative rationality)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합리성은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적 이해로부터 나타난 효과이거나 혹은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대중담론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확고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담론윤리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이상적 발화 상황(ideal speech situations, ISS)이라는 개념은 담론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으로 제시된다.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합리성은 도덕과 정치적 주장에 대한 이상적 발화에서 타인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의사소통적 행위의 한 형태다. 의사소통적 행위에 참여하는 각각의 참여자들은 합리적—비판적 의사소통에 대한 다수의 실용적 전제조건들을 참조한다(Habermas 1984a: 25). 한편, 하버마스는 이러한 일련의 이상적 발화 상황의 규범적 규칙들(ISS)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음을 시인한다(Outhwaite 1994: 4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얻을 수 있는 내적, 외적 발화 상황의 요건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시공간에서 토론의 질서, 즉 누가 그리고 어떤 순서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외적·구조적 관점에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Habermas 1984a: 26):

- a. 이상적 담화상황의 구조는 억압과 불평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b. 이상적 담화상황은 보다 나은 논의(better argument)를 목적으로 한다.
- c. 이러한 더 나은 형태의 논의는 성찰의 연속과정(reflective continuation)을 거친 후에야 가능하다.

둘째, 내적·절차적 관점에서 보면, 담론의 과정은 심의(deliberation) 과정에서 화자가 말한 진술의 합리성을 요구하는 주제별 타당성(thematised validities)에 입각하여 ‘발화행위에 대한 보편화용론적 규칙(universal pragmatic regulation)’을 뜻하는 내적 구성을 따라야 한다(Habermas 1984a: 25). 다음으로, 절차적 관점에서 보면, 담론의 과정은 심의(deliberation) 과정에서 ‘발화행위에 대한 보편화용론적 규칙(universal pragmatic regulations)’을 뜻하는 내적 구성을 따라야 한다. 이때 보편화용론적 규칙들은 화자가 말한 진술의 합리성을 요구하는 테

마별 타당성(thematised validities)에 상응해야 한다(Habermas 1984a: 25). 하버마스가 보편화 용론(universal pragmatics)을 도입한 이유는 촘스키(Chomsky)의 언어능력 이론(theory of linguistic competence)을 의사소통행위이론(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보편화용론은 우리가 “복잡한 상호작용을 생성하는, 즉 사회 자체의 상징적 실재를 생성하게 되는 규칙체계를 발견하고 재구성할 수 있게 한다”(Habermas 1984b: 82, Outhwaite 1994: 40에서 인용)고 한다. 보편화용론은 문장이 아니라 발화(utterance)의 내용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일반 언어학과 구분된다. 사회-언어학은 발화가 특징하고 가변적인 맥락에 묶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보편화용론의 역할은 가능한 이해에 대한 보편적 조건을 파악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Outhwaite 1994: 40).

3. 타당성 요구들(Validity Claims)

하버마스(1984)는 모든 소통행위가 공통적인 상호이해(common understanding)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토론 및 담론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소통의 적절성(relevance of validity)은 수용되고 반박되는 의사소통적 타당성 요구들(주장들)을 통해 검증된다.

화자와 청자의 소통은 다음의 세 가지 타당성 요구로 구성된다. 첫째, 포괄적인 진술(혹은 존재자체에 대한 명제들)의 ‘진리성’, 둘째, 화자의 규범적 발언이 승인된 규범적 맥락 속에서 정당한가라는 언어 행위의 ‘정당성’, 셋째, 주관적 경험의 표현이 솔직한가하는 표현의 ‘진실성’(1984: 99)이다. 화자와 청자의 ‘배경에 대한 동의(background consensus)’는 그들이 암묵적으로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이를 정당화했다는 사실을 포함한다(Outhwaite, 1994: 40).

하버마스는 담화를 통한 진실에 대한 언명이 단순히 사실에 대한 발화(utterance)와 실재(reality)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가 사물이나 진리 그 자체 그대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일치(correspondence) 혹은 진리의 거울 이론(mirror theories of truth)에 도전한다. “사실에 대한 진술과 실재 사이에 가정된 일치란 오로지 진술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Outhwaite 1994: 41)“. 즉, “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동일한 속성을 부여할 때만 나에게 대상에 특정한 술어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즉, 진술이 참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다른 사람의 잠재적인 동의다(Habermas 1984b: 126, Outhwaite 1994: 41에서 재인용)“.

하버마스는 기본적으로 사실적 진리(factual truth)에서 도덕적 및 자기표현적 진술의 진실성에 이르는 타당성 요구를 포괄하는 ‘합의에 의한 진리 이론(consensus theory of truth)’을 제시했다. 하버마스는 상식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진리에 대한 기술과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 우회적인 접근(long-winded approach)을 취한다. 첫째, 이 방식은 이상적 발화 상황이 이성적인 형태의 삶으로서 의사소통을 통해 공유된 상호주관적 동의에 대한 참조를 구성한다고 한다. 둘째, 진리에 대한 보편적 이론과 대등하게 윤리나 미학적 판단에 합의의 기반을 둔 합리성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한다(Outhwaite 1994: 41). 그러나 이러한 규범들의 타당성 또는 주관적 감정의 정직한 표현은 사실적인 진리와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혼동은 규범적 타당성을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진리와 허위는 또한 윤리적 진술에도 해당된다.

또한 하버마스는 심의적 타당성 모델은 발화행위(speech acts)에 의해 제기되는 모든 타당성—주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더불어 합의추구에 바탕을 둔 진리이론은 진리와 정당성(rightness)에 대한 주장에만 적용되는데, 이는 진실성(Wahrhaftigkeit)에 대한 주장은 행동으로만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Outhwaite 1994: 42).

이들 각각의 타당성 요구들은 객관적 세계, 사회적 세계, 주관적 세계에 상응하는 것이다. 즉, 각각의 타당성 주장들은 상호이해를 지향하며 행동하는 주체들이 상황에 대한 공통적인 정의를 내리는 바탕이 되는 삼중의 세계와 연관된다. 이 세 가지 세계와 이에 해당하는 타당성 요구, 엄밀히 말해서 사실, 규범, 경험은 사회적 행위의 종류들을 규정하는 틀을 형성한다(Habermas 1987: 134). 하버마스는 이러한 세 가지 세계 개념을 단순히 ‘물질적(materially)’인 것이 아닌 ‘형식적(formally)’인 것으로 규정한다. 먼저 객관적 세계(objective world)는 어떤 참된 명제가 가능하나에 대한 “사실의 총체”로 규정된다. 둘째, 사회적 세계(social world)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합법적인 대인관계들에 속하는가를 규정하는 규범적 맥락”을 구성한다(Habermas 1984a: 88). 이러한 사회적 세계는 규범, 규칙, 가치의 형태로 도덕적, 실제적 삶(지식)을 구현한다. 셋째, 하버마스는 행위자 외부에 있는 객관적 및 사회적 세계에 대한 보완으로, “행위자가 우선적인 접근을 갖는 주관적 경험들의 총체성”으로 정의되는 내적 또는 주관적인 세계 개념을 내놓았다(Habermas 1984a: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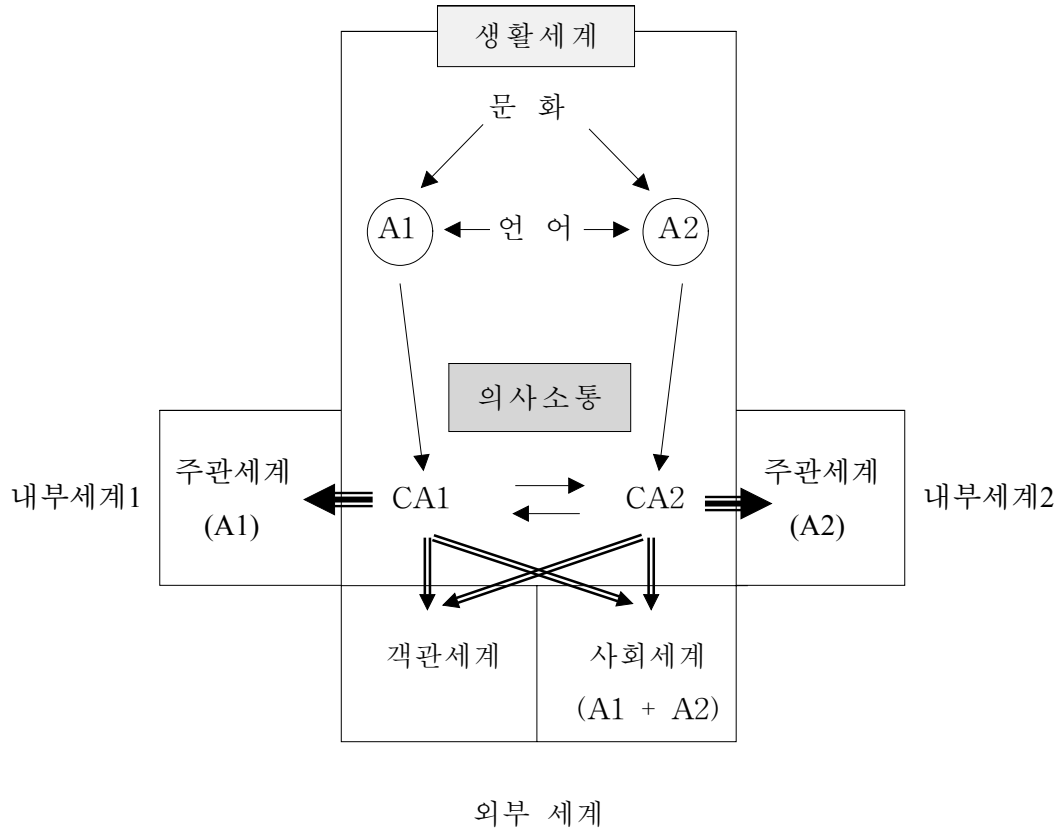
하버마스는 이상적 발화 상황 및 타당성 요구들과 양립하는 보완적 개념으로서 생활세계를 도입하였다. 문화, 사회, 개성(personality)의 세 구성요소를 갖춘 생활세계는 의사소통행위, 적극적인 주체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이 되고, 따라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이 된다. 그러므로 생활세계는 의사소통 과정을 위한 언어적 맥락을 형성한다. 동시에 의사소통행위는 생활세계를 재생하는 매개물이 되며 다음의 세 가지 구성요소 역할을 한다(Habermas 1984a: 337). 첫째, 상호이해라는 기능적인 측면에 입각해서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한 문화적 지식을 전승하고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며, 둘째, 사회조정의 측면에서는 사회적 통합과 결속 면에서 봉사의 책임을 맡는 역할을 하며, 끝으로, 사회화와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

생활세계가 모든 발화행위들의 준거체계를 구성하는 이러한 세 가지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하버마스는 “생활세계는 상호이해를 목적으로 구성되는 반면, 형식적인 세계 개념들은 어떤 상호이해가 가능한지에 대한 준거 체계를 구성한다. 즉, 화자와 청자는 객관적, 사회적, 또는 주관적인 세계에 있는 사물들에 대한 공통적인 생활세계로부터 특정한 이해에 이르게 된다(1987: 126)”고 설명한다.

생활세계는 위에서 언급한 전형적인 세 가지 세계 개념들과는 다른 차원의 위상을 갖는다. 비판 가능한 타당성 요구와 함께, 이러한 세 개의 세계 개념들은 이미 상당히 해석된 생활세계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즉 의견의 일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의 질서를 잡기 위한 범주적인 골조(scaffolding)를 형성한다. 이러한 형식적인 세계개념과 함께 화자와 청자는 자신들의 발화 행위의 가능한 지시대상에 부합시켜, 객관적이거나 상호주관적이거나 혹은 주관적인 것과 연계시킬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생활세계는 유사한 상응(analogous assignments)을 허용하지 않아, 화자와 청자는 “상호주관적인 것”을 말할 수 없게 된다(ibid: 126). 즉, 참여자들은 사실상 언어와 관련해서 혹은 사실, 규범, 혹은 경험의 총체성과 관련해서 같은 거리를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의 그림 2는 의사소통행위의 세계연관 그림으로, 형식적 세계 개념들이 상호이해의 대상이 되는 것을 위한 기준체계를 다루는 반면, 생활세계는 상호이해 자체 본질적인 것이라는 점을 보조적으로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2〉 의사소통행위(CA)의 세계-관계.



출처(HABERMAS 1987: 127)

※ 이중화살표는 행위자(A)가 발화(CA)함으로써 정립되는 세계-관계를 가리킨다.

4. 의사소통적 권력

하버마스는 다른 심의 민주주의자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정당성, 특히 절차적 정당성이 이상적 발화 상황과 일치하는 대중심의의 상호주관적 과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대중심의의 강조한다는 것은 정부의 피드백을 통해서 대중심의와 공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관계맺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물음을 전제로 한다. Dryzek(2000:7)은 대중심의가 사회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에 이르게 하는 수단인지, 아니면 특정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해결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심의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짐으로써 대중심의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다.

John Stuart Mill과 Hannah Arendt는 대중심회의의 본질적 역할은 시민에게 교육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데 있다고 단언한다(Bohman and Rehg 1999). 이들에게 있어 민주적 참여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심의모델은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대중담론에 있어 시민참여가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Hacker 2002). 하지만 Elster(1998)와 Dryzek (2000)는 이런 관점이 순진하다고 주장하였는데, 민주적인 정치가 교육적 효과를 “부산물”로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관점은 반드시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내재적인 이점이 있을 때에만 지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이상적 발화상황은 심의를 바라보는 두 입장, 즉 대중심의를 수단으로 보는 관점과 목적 자체로 보는 관점 모두를 아우르지만, 대체로 그의 의사소통행위 이론은 Elster(1998)의 의견에 보다 근접해있다. 즉, 하버마스는 나아가 정치적 선택이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자유롭고 동등하며 합리적인 행위자에 의한 심의의 결과여야 한다고 강조한다(Elster, 1998:5). 사실성과 규범성(Between Facts and Norms, Habermas 1996) 이후 하버마스는 점차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반영하면서, 시민사회의 의사소통과정이 국가의 입법과정과 정치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Rehg 1996: xxxvi). 공론장(public sphere)에서 생성된 “의사소통 권력”이 행정적 국가권력으로 변환된다는 개념, 즉 심의정치의 “이중적 궤도(two-track)” 모델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룬다(ibid: xxxi).

권력을 비강제적 의사소통에서 형성되는 공공의지의 잠재력으로 이해한 Adrent에게 영향을 받은 하버마스(1996: 136, 169)는 정치권력이 두 가지 종류, 즉 행정권력과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행정권력은 공공행정 시스템 안에 이미 자리를 잡아 그 일부가 되었으며, 제재를 가하거나 조직적으로 체계화하거나, 집행을 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버마스(1996)는 의사소통 합리성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 의사소통적 권력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의사소통적 권력이 정치과정에 대한 소통 모델의 핵심에 있다고 말한다(Flynn 2004). 정부체제 속에 이미 배태되어 있는 행정권력과 달리, 의사소통적 권력은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발현된다. 이 권력은 합법적으로 제도화된 의지형성(will-formation)과 문화적으로 동원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된다(Habermas 1996: 301). 그러나 이렇듯 의사소통을 통해 생성된 권력은 희박한 자원이기 때문에 사회조직들은 이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관료들은 이를 관리하지만, 사회조직이나 관료들 어느 쪽도 이러한 의사소통적 권력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ibid: 149). 동시에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을 통해 생성된 여론이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한다(ibid: 150).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권력이 “포위(siege)”의 방식으로 행사되지만, 정치시스템 안에서 체계 자체를 식민지화하려는 의도 없이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소통적 권력의 행사는 자기 한계적(self-limited)이라고 주장한다(1996: 486~487). 달리 말해, 민주적 절차에서 비롯되어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발전하는 여론은 그 자체로는 “통치” 할 수 없고 오로지 행정권력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Habermas 1996). 의사소통적 권력의 행정 권력으로의 전환은 법에 의해 규정된 권한 내에서 권한을 강화시키는 특징을 갖는다(ibid: 150). 여론은 시민의 투표 행위나 의회, 행정기관 및 법정에서 의지형성(will-formation)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치적 잠재력을 대표한다(ibid: 363).

하버마스(1996)는 또한 체계 또는 제도의 주요 양상들 (예를 들어 선거, 입법부에 의한 입법, 정책의 합법적인 행정적 집행)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제도화를 강조하였다. 여론은 구속력이 있는 정치적 결정(행정권력)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의사소통적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지만, 이는 오로지 제도화된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Rehg 1996: xxvii).

하버마스(1996:150)는 합법적·규범적 요건의 측면에서 공식적인 정치시스템과 공론장에서의 비공식적 대중의 의사소통을 구분한다. 제도화된 심의 기구들은 권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반면, 비공식적 대중의 의사소통은 공식적인 정치시스템이 다루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문제를 탐지하거나 이슈를 형성하기 위해서 작용한다. 따라서 비공식적인 대중의 의사소통은 행위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의사결정의 부담은 없다. 반면에 형식적인 정치체계는 권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행정권력은 가질 수 있으나, 그들의 심의와 결정은 비공식적인 대중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이는 정치체계와 특히 정부행정이 시민들의 관심사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효율성에 관심이 집중된 독립적인 체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부패의 경로를 통해 행정 권력에 접근하는 특정한 이익을 대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정은 법에 의해 지정된 자체의 이성적 기준에 복종하게 된다(ibid: 4장). 이러한 까닭에, 정치권력은 의사소통적 권력으로부터 비롯된 규범적 이성이나 합법성에 의존하게 된다(ibid: 483~484). 대중의 의사소통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자율적인 공론장에서 발전·전개되고, 공식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수용적인 대표기구에 관여(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Bohman and Rehg 1999: xv). 이와 유사하게 Elster(1998: 13)는 공식적 의사결정과 비공식 여론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성적 합의에 대한 규범적인 기준들과 심의적 결정과 적절한 제도적 장치의 관계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괄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행위이론과 이상적 발화 상황은 의사소통적 권력과 함께 정당성의 위기(어떻게 의사소통행위가 식민지화되었으며, 또 어떻게 그러한 식민지화가 정당성

을 침식했는지)를 완화시킬 수 있다. 더불어 의사소통행위이론은 의사소통행위와 이상적 발화 상황을 정당성 회복의 방법으로 제시하였다(Outhwaite 1994). 하버마스는 이상적 발화 상황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설명한다. 이것은 공공심의회와 공공정책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이다. 이렇듯 미래의 민주주의에 대한 하버마스의 견해는 다소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는 비록 행정의 관료화가 정책 전문가들과 정치가들에 의한 관리감독을 저해할 수 있지만, 대중심의회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정부에 대한 대중의 통제를 회복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하버마스(1996: 362~363)는 여론의 심의적 질(quality)은 실증적이며,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치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당성을 측정하는 토대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하버마스의 심의적 민주주의 담론에 사용된 주요 개념들을 경험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III. 하버마스 이론의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 적용 사례

앞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과 의사소통적 권력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들을 살펴 보았다. 이 부분에서는 온라인 참여의 내적 과정과 본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온라인 참여활동의 심의적 수준과 그것이 실제 정책 수립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전자적 참여의 내부적인 절차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며, 이렇게 함에 있어서 온라인 참여의 내적 과정과 본질이 하버마스의 대중의 심의 모델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점점 많은 정부 기관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정부가 주도하는 대중심의회에 대한 관심 역시 고조되고 있다. 정부 웹사이트는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창구로 홍보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거의 모든 정부기관들과 부처들이 대중의 참여가 가능한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기술이 대체로 모든 전자정부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터넷 상에서의 대중심의회는 정부가 다루어야 하는 정책적·정치적 이슈들을 보다 명확히 논의하고 다듬기 위한 ‘공명판(sounding board)’으로서 정부 웹사이트가 가지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Wilhelm 2000: 86).

이 글은 정부 웹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참여 프로그램들이 일정한 수준의 심의적 질을 담보하고 있는지, 또한 실제적으로 정부정책 수립 과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결과적으로 이러한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들이 ‘의미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이론, 이상적 발화 상황, 의사소통적 권력이라는 하버마스의 개념들에 견주어, 온라인참여 및 대중심의의 촉진과 전자정부가 갖는 심의 민주주적 잠재성과의 연관성을 고찰할 것이다. 즉,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 이상적 발화 상황, 의사소통적 권력은 전자정부 환경에서 정부주도의 온라인 참여 실천이 갖는 심의 성과 정책적 영향력을 측정하는 분석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평가는 현재 인터넷의 민주주의적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인 인터넷 연구를 발판으로 일반적인 수준까지 진행된다.

1. 온라인 참여에 대한 사례연구

이 부분에서는 정책적 심의와 정책수립 과정에 있어서 온라인 참여의 내적 특성 및 과정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 웹사이트는 의미 있는 대중심의가 가능한 유용한 온라인 참여의 공간을 제공해왔으며, 정책수립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대중의 영향력을 이끌어냈는가?” 이러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세부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

- 온라인 국민 참여는 대중 심의의 질을 심화시켰는가?
- 온라인 국민 참여는 정책수립에 실제적 영향력을 미쳤는가?

첫 번째 질문은 온라인 참여가 대중토론 또는 논쟁에 있어 심의적 수준을 담보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물음은 온라인 참여가 정책수립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물음에 답하기 위해, 구체적인 온라인 참여활동과 이에 수반되는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인터넷의 광대한 규모와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자원,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대부분 기술적으로 정의된 ‘웹사이트’ 안에서 혹은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례연구는 온라인 참여를 통한 대중심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대통령실 산하 국민참여마당(KCM, Kukmin Chamyao Madang)¹⁾에서 두 개의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KCM을 선택한 이유는 국민의 참여도가 높고, 대통령실에서 이 온라인 참여 프로젝트 운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 대표 포털 사

1) 현재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바뀌었으나, 제안마당은 [국민제안]으로, 토론마당은 [정책토론] 코너로 명칭만 바뀌어 운영되고 있다.

이트(www.egov.go.kr)가 있기는 하지만, 중앙정부기구 전반에 걸쳐서 참여활동을 주도하는 공통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하지 않다 보니 국민들은 정부 포털을 통해서도 정부활동의 어떤 단계에도 참여할 수가 없다. 게다가 다른 정부기관의 참여 공간이나 KCM 웹사이트로의 체계적인 접근도 불가능하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정부 포털 사이트의 모든 온라인 공개 토론장에 국민들이 올린 게시물은 일 년 평균 10개 남짓한 반면, KCM의 국민 평균 게시물 수는 하루에 120~150개에 달한다. 제시된 주제와 토론을 위한 기본적인 세부사항은 정부기구에 내부적으로 배포된 행정문서와 차이가 없으며, 주어진 토론에 어떻게 참여하고, 무엇에 대해 토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도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 포털은 사례연구로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 부처의 웹사이트 역시 제공하는 참여 공간에서의 국민의 참여와 반응이 거의 없고, 활성화 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한편,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국민참여마당 웹사이트는 하루 평균 150건(일일 홈페이지 열람횟수는 약 18,800회)의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며 활발한 활동을 펴는 유일한 정부 사이트로 보인다(국민참여혁신수석실, 2003). 또한 국민참여마당에는 온라인 참여에 대한 고위관리자의 책임과 함께 자체적인 참여 프로젝트 팀이 있다.

국민참여마당 웹사이트에서 선정한 두 가지 전자참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국민참여마당 온라인포럼(토론마당)
- 국민참여마당 온라인제안(제안마당)

국민참여마당 온라인 포럼(eForum) 사례는 심의의 질(quality)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온라인 제안(eProposal) 사례는 온라인 시민 제안이 정부정책 및 정책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사례연구들은 공적 참여와 심의 기제로서 현재 정부기관 웹사이트의 사용이 민주주의적 실천과 정부의 정당성을 확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두 전자참여 프로젝트 사례연구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는 정부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온라인 참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한 연구에 심도 있게 활용되었다.

사례 1. 온라인 포럼(eForum): 토론마당

2002년 대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참여마당 웹사이트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적극적 도입과 활용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되었다. 이 웹사이트는 정부기관 전반에 걸친 참여 프

로젝트를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및 제도적 개혁을 위한 원형(原型)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가졌다. 국민참여마당 웹사이트는 제안마당(온라인 국민제안), 토론마당(온라인 국민토론), 인터넷 신문고(민원), 삼고초려(정부 피임명자 추천), 홍보마당(홍보 혹은 광고) 등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토론마당과 제안마당에만 초점을 맞춘다.

우선, 국민참여마당의 온라인포럼, 즉 [토론마당]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각 토론장은 “공직자의 윤리강령에 대해서”나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등과 같이 단일한 주제를 가지고 제한된 기한 내에 자유 토론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들이 각 주제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제에 대한 적절한 근거 자료들이 제공되고, 누구나 이 토론장에 글을 게시할 수 있다. 각 주제에 관한 토론의 내용이나 요약은 주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그러나 온라인 포럼에서 이루어진 대중토론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의무화된 규정이나 절차는 없다. 따라서 토론마당에서 논의된 토론의 결과의 이용에 대한 결정은 대체로 한 사람의 웹마스터 또는 민원담당 실무자에게 달려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연구하였다. (a) 심의적 평등(deliberative equality)이 보장되는가?; (b) 대중토론의 전반적인 질은 얼마나 심의적인가?; (c) 온라인참여가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가?; (d) 심의의 결과가 향후 의사결정에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드백이 제공되는가?

사례 2. 온라인 제안(eProposal): 제안마당

두 번째 사례는 온라인 참여마당의 정책 제안 프로그램인 [제안마당]이며, 이곳은 누구든지 행정정책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올릴 수 있는 곳이다. 이를 보면, 행정관리의 비용절감 및 효과성을 저해하는 규칙이나 규제에 대한 행정개혁에 대해 누구나 자신들의 생각이나 제안을 게시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하지만, 제안마당은 단순한 민원 혹은 이미 접수된 제안이나 반복·유사한 제안 그리고 국가 및 지방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비현실적인’ 제안은 제외된다. 절차적인 측면을 보자면, 제출된 모든 제안은 대통령 참여혁신수석실에 의해서 설정된 네 가지 선택적 범주, 즉 독창성, 기대되는 정책적 효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노력 등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된다. 나아가 제안은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즉 (a) 채택된 제안, (b) 장기적 검토사항, (c) 정부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제안, (d) 스팸을 포함한 비생산적인 메시지 등이다. 국민참여 정책실에서 수용한 제안은 일반적으로 관련부처, 부서, 전문가집단으로 보내져 선별된다. 선택된 제안은 검토를 위해 청와대로 보내진다. 수용된 제안은 제안마당 웹사이트의 결과 확인에 게시 및 발표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SMS 메시지)를 통해

서 관련 참가자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국민참여마당의 월 1회 피드백 시스템은 최고 제안에 대한 포상이 곁들여져 국민의 온라인 제안 웹사이트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동기를 진작시킨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a) 다른 유형보다 정부 측에 의해 더 잘 받아들여지는 제안의 유형이 있는가?; (b) 국민들의 온라인 제안이 정책수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쳤는가? 즉, 온라인 제안이 정부기관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변화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이러한 질문들을 검토하기 위해, 이 연구의 다음 절에서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이론, 이상적 발화 상황, 의사소통적 권력에 대한 개념들을 적용하여 온라인 참여의 심의적 수준과 실제적 정책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2. 분석도구로서의 하버마스의 담론 개념들

하버마스의 합리적이고 합의 지향적 담론모델은 현재 사회생활이라는 현실에서 분명 이상주의적일 것이다. 여기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의 일부 측면을 설명하는 분석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이상적인 모델을 약간 수정할 것이다. 이상적 발화 상황(ISS)은 사람들이 사회적 불평등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말하고, 동등한 표현의 기회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이상적 발화 상황은 사람들이 합의와 합리적 논의를 추구하는 토론에 참여할 때 가능하며, 합의와 합리성은 참여자들의 자기성찰의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Habermas 1984a). 덧붙여, 개인적인 의견과 관점은 앞서 언급한 타당성 요구들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실에 있어, 일상생활과 정치적 삶은 발화 상황에서 전략적 이해관계(strategic interest)와 동기로 가득하다. 하버마스는 실제 논의의 맥락은 이따금 이상적인 발화 상황과 상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상적 발화 상황에 대한 전제조건들은 개선되어야 하고, 타당성 요구 역시 약간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1984: 26). 그러나 모든 대화나 토론이 어떠한 합의점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이상적 발화 상황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염두에 두고 있으며, 또한 모든 의사소통에 내재된 주장의 구조적 특징이라는 점에서 실제적이다. 즉, 사람들은 상호이해(mutual understanding)에 의해서 진리에 도달할 가능성을 손쉽게 가정한다. 또, 논의 중인 관점이 갖는 타당성의 설득력에 따라 때로는 암묵적, 또는 융통성 있게 의견을 바꾸는데 동의한다.

‘이상적 유형(ideal type)’은 ‘이상적인 관료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베버의 관료주의에 대한 분석 등과 같이 고전적인 사회과학 텍스트(그리고 경제학의 완전한 시장여건)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상적 유형’ 개념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그 자체로 실현가

능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개념을 도입하는 주요 취지는 비교·분석적 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상적 유형은 사회학적으로 말해서 완벽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일련의 행동 또는 상황을 기술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따라서 이상적인 유형은 이러한 ‘현실적’, ‘실제적’ 상황에서의 불합리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종종 ‘이상적 유형’은 ‘완벽한’ 현상, 즉 일종의 결론에 도달하는 상황을 비교연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비슷한 예로는 이상적 발화 상황 조건들이 하나의 분석적 잣대로 작용하는 하버마스의 ‘공론장(public sphere)’ 개념을 들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온라인포럼은 대중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 하에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취지는 이상적 발화 상황(ISS)의 개념을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이상적 발화 상황을 분석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온라인 포럼을 분석할 때 도달해야 할 이상적 상태와 현재의 상태 간에 괴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별, 교육, 혹은 연령과 같은 문제들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명백하게 나타났다면(정부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의미 있는 토론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상황은 점점 불합리해지거나 이미 정립되어 이상적 발화 상황에 적용이 가능한 기준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수 있다. 즉, 성별, 교육, 연령 등과 같은 사회적 배경이나 지위의 부재는 온라인포럼의 논의의 초점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로부터 영향 받지 않고(참가자들은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인식하지 않음), 오히려 논의되는 말과 주장에만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이들에게 온라인 참여가 허용된다면 어떻게 전체적인 담론의 질이 유지되고, 진술의 타당성이 입증될 수 있을까? 종종 이상적 발화 상황의 관건은 어떻게 완벽한 합리적인 의사소통행위를 성취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다. 아마도 현실적인 해결책은 일종의 규제적 조치(이는 하버마스도 이상적 발화상황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다)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이 조치는 이상적 발화 상황의 기준에 따라 의사소통행위의 절차 또는 과정을 감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포럼 중재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하지만 이것은 그 자체에 명백한 문제점이 있다). 물론 실제로 규제는 문제의 토론을 스스로 조절하거나 그렇지 않는 각각의 포럼 참가자들로부터 나올 수 있지만 말이다. 모든 게시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종종 게시물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수록 반론의 목소리는 더 커진다.

이러한 포럼에서 이루어진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수용의 측정도 외부에서 이루어지며, 이후에 정부 관료나 정책수립자에 의해서 다루지게 된다. 특정한 주제에 대해 게시된 글의 수준과 양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버마스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형태의 토론, 논쟁, 숙고한 논의 등의 ‘의사소통행위’ 목적은 이성(reason)의 달성에 있다. 즉, 화자 간의 역학 관계(이를테면,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에 있어)가 아닌 합리적인 논의가 핵심이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상적 발화 상황의 목적은 참여자 자신의 이익추구라는 욕망이 배제된 합리적 주장의 성취이다. 물론, ‘현실적’ 또는 실제적 맥락에서는 이러한 ‘이상적인 유형’의 상황이 충족되기 힘들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ISS를 기준으로 한 의사소통과 토론 분석이 갖는 또 다른 긍정적 특징은 참여자들이 반응하고, 대답과 질문을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는 점이다. 이렇듯 온라인상에서 주어지는 숙고와 성찰에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더 나은 논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정보통신 기술과 갖는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상적 발화 상황을 더 넓은 사물의 도식에서 생각해 볼 때, 이를테면 의사소통행위나 부수적으로 생기는 힘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위치를 생각해볼 때 더욱 명백해질 것이다. 하버마스는 정보통신기술이 중재한 의사소통을 체계적 세계가 인간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려는 시도에 대한 증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적 발화 상황에서 어떠한 언어 행위에도 타당성 요구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포럼에서 행해지는 토론 행위에도 분명하게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례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온라인 참여적 심의 활동을 이상적인 발화 상황, 타당성 요구, 의사소통적 권력이 행정적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련의 요건과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적 발화 상황에서 제시하는 담론윤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이상적 상황에 가깝게 만들어내기 위한 견제와 균형 체제를 형성하는 일련의 설계 원리에 의해서 조작화가 가능하다(Dahlberg, 2001b; Outhwaite, 1994; Spöndli, 2003).

이상적 발화 상황과 타당성 요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 인터넷에서 소통되는 현대의 대중담론이 하버마스가 설명한 이상적 상황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상적 발화 상황과 그 타당성 요구를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인터넷의 의사소통행위의 실제적 측면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 설명력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배경과 사회적 단서들을 짐작케 하는 하버마스(1984)의 개념인 ‘배경에 대한 합의(background consensuses)’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상적 발화 상황의 이론적 모델은 각 단계가 뚜렷이 구분되는 것처럼 확실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온라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약간의 수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온라인 참여 공간에서 의사소통의 실제적인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이상적 발화 상황 개념을 온라인 환경에 맞게 조율한다. Mendelberg와 Oleske(2000: 170)는 “이상적 타입은 좋은 심의라는 연속선의 최종목표 지점인 동시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심의를 평가하는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중심의라는 하버마스의 핵심 개념을 오늘날 인터넷상의 공적인 의사소통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Dahlberg (2001a), Hague와 Loader (1999), Heng와 De Moor

(2003), Spöndli (2003), Trénel (2004), Westholm (2002), Westholm (2003), Wilhelm (2000), Winkler (2002) 등의 연구를 참조했는데, 이들이 국가와 대중, 그리고 대중과 대중 사이에서 인터넷을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하버마스의 핵심적인 개념, 즉 합리성(타당성 요구를 기초로 한), 토론에 있어 평등한 기회, 의견 교환(exchange), 성찰(reflection)은 새로운 웹 기반 환경에서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서 제안하는 내용분석의 코딩시스템은 온라인 심의 측정에 대한 새로운 도구의 창출이 아니라 온라인 참여적 심의의 차원에 대한 그들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아래 표 1은 기존의 실증적 연구에서 조작화된 대중심의의 핵심 요소를 보여준다.

Habermas (1984, 1996)	Schneider (1997)	Wilhelm (1999)	Muhlberger (2000)	Dahlberg (2001)	Coleman et al. (2002)	Hagemann (2002)	Winkler (2002)	Westholm (2003)	Spöndli (2003)
의견교환 및 비평	상호작용상	의견의 교환		의견교환 및 비평	상호작용의 수준	상호성	상호작용성	토론의 질	
의사소통적 합리성(정당성)	질	합리성			타당성과 질	합리성	합리성	메시지의 질	정당화의 수준
평등성	평등성	의견 동질성	평등한 지위	통합과 평등성	성 균형 (gender balance)	토론의 개방성	평등적인 측면들		참여
		경청의 정도		이상적인 역할 맡기 (ideal- role taking)					존중
의사소통적 권력			조화						건설적인 정치
			대립적인 논쟁들			공공의 관심사			
성찰			성실성	성찰적					
	다양성		성실성	성실성					
			관계형성						
체계와 화페로부터의 자율성				체계와 화페로부터의 자율성					

1) 사례 연구를 위한 평가기준

온라인 토론 및 심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방법 특히 내용분석의 코딩 방법은 Goldkuhl (2000), Hague와 Loader (1999), Westholm (2002, 2003), Wilhelm (2000), Winkler (2002) 등으로부터 차용하였다. 이 연구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

이론 / 이상적 발화 상황에 대해 수정된 기준을 선택하였다. 합리적·비판적 심의를 위한 하버마스의 이상적 발화 상황 조건은 온라인 맥락을 위해 재구성되었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대중심의회와 관련해 실증적 분석에 사용한 개념들 가운데 공통적이며 핵심적인 세 가지의 개념들을 추려볼 수 있다. 즉, 심의적 평등, 상호교류(쌍방향성), 합리성(심의적 질)이다. 이와 더불어 ‘의사소통적 권력의 행정권력으로의 전환’이라는 하버마스의 개념은 온라인 국민제안을 분석하기 위해서 채택했다. 연구 대상이 되는 두 가지 온라인 참여 사례의 코딩 방식에 선정된 핵심 지표를 적용하였다.

(1) 심의적 평등(Deliberative equality)

하버마스는 지금까지의 소통은 의제 설정이나 참여에 있어 기회가 불평등함으로 인해 왜곡되어 온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소통의 불평등한 조건에 대한 반기로 그는 사회적 행위자들이 “왜곡되지 않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적 의사소통의 조건인, ‘이상적 발화 상황’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앞서 밝혔듯이, 온라인 참여는 비공식적거나 접근에 공식적인 제한을 가하는 외적 요인으로 인한 불평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참여는 내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참가자 혹은 집단이 토론을 지배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소외시키게 된다(Dahlberg 2001b).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모든 포럼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외적 불평등 요소는 종종 정보격차 내지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고 불린다. 이 정보격차 논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서 나타나는 정보격차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정부가 배포한 전국 통계를 살펴보면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온라인 참여 평등의 내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온라인 참여 심의 과정에 있어 불평등, 즉 소위 ‘심의적 평등(deliberative equality)’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토론이나 소통에 있어 특정인이나 그룹의 지배(domination)나 독점의 명백한 지표는 특정한 포럼에서 게시된 게시물의 양과 게시 빈도에 나타나는 불균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 쌍방향성(Interactivity)

쌍방향성은 모든 의사소통의 전제조건이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내용 분석 등을 통해서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Dahlberg 2001b). 이 논문에서는 내용분석 방법을 채택했다. 첫째, 형식적인 측면과 수평적(시민들 간)·수직적(시민과 정부)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쌍방향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전자가 단지 형식적인 연계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실질적인 상호작용은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상대방의 의견을 고려 내지 참조하는지를 포착하는 것으로, 그 정도는 다음의 네 가지 범주: 의견제시(provide), 의견탐색(seek), 의견통합(incorporate), 응답(reply)을 바탕으로 논의할 수 있다. 의견제시와 탐색 타입의 메시지는 전적으로 정보, 의견, 질문 혹은 개방형 언급을 제공하는 반면,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은 타인으로부터의 의견 또는 아이디어나, 기존에 게시된 메시지에 대한 응답 혹은 직접적인 대답을 포함한다(Wilhelm 2000).

(3) 의사소통의 합리성(타당성 요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타당성 요구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세 번째 주관적 경험의 솔직하고 규범적인 표명, 한마디로 정직성 또는 진실성(혹은 허위의 부재)은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인터넷 상의 의사소통은 사회적 환경을 알 수 없는 탈맥락화(de-contextualised)된 상태에서 일어나므로, 소통의 참여자가 어디에서 혹은 어떤 환경에서 메시지를 보내는지 알지 못하여 그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환경에서, 진실성(sincerity)에 대한 하버마스의 타당성 요구는 증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지며, 익명이나 가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화자의 사회적 맥락이 전무한 이러한 환경에서는, 화자의 정체성과 개인적 경험이 결여되어 있다고 단언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본 연구는 그 범위를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세계라고 일컬을 수 있는 객관적 진리와 정당성(사회적 규범)에 대한 하버마스의 정당성 주장으로 국한하였다. 온라인 게시물과 관련하여 Wilhelm(2005:95-96)의 ‘on-topic(주제와 유관)’과 ‘off-topic(주제와 무관)’이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사용할 것이다. 이 구분 방법은 기본적으로 의미론, 즉 온라인 게시물에 사용한 말 혹은 언어, 진술의 의미와 취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 말하자면 “이러한 표현의 의미론적 내용, 타당성에 대한 조건, 진술문의 진실에 대한 이유 사이의 내적 관계의 견지에서” 하버마스의 합리성을 취하는 것이다(1984: 9). 요컨대 Wilhelm은 게시물이 그 입장의 타당성에 대한 이유 혹은 주장을 제공한다면, 이성적으로 동기 부여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하버마스는 만일 하나의 게시물이 타당성을 위한 조건이나 진술문의 진실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다면(대체로 개인적인 편견, 개인적인 이해관계, 선전 혹은 미학적 판단 등을 바탕으로 호소하는 경우), 이는 왜곡된 의사소통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4) 의사소통권력에서 행정 권력으로의 전환

의사소통적 권력에서 행정적 권력으로의 전환에 대한 하버마스(1987, 1994, 1996)의 개념

과 관련해서, 온라인 심의(토론)가 정책결정 과정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온라인 참여 심의활동의 정치적 효능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서 먼저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온라인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 웹사이트나 포럼이나 제안에서 자신들의 온라인 참여가 정책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둘째, 유사한 방법으로 온라인 참여 심의활동에 대한 정부기관의 인식을 설문조사나 인터뷰를 실시하여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정책제안과 국민이 제출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취한 정책적 조치 또는 집행사항의 유무와 관련한 정부 문서를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끝으로, 한 걸음 나아가 온라인 국민제안에 대한 내용 분석을 직접 실시하고 그것이 정책수립에 미친 영향을 추적할 수 있다.

원래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이상적 발화 상황과 의사소통적 권력 이론에서 핵심 지표는 온라인 참여가 KCM 온라인 포럼인 토론마당과 관련해서 참여자의 심의적 질(quality)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온라인 심의의 질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 무엇이 온라인 참여의 심의의 질에 대한 초석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여 구분할 수 있다.

- ① 국민참여마당 온라인 포럼이 심의적 평등을 향상시켰는가?
- ② 국민참여마당 온라인 포럼은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담보하였는가?
- ③ 국민참여마당 온라인 포럼 참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는가?

따라서 ‘심의적 평등’, ‘합리성(심의적 질)’, ‘상호작용’ 등은 온라인 토론을 평가하는 주요 변수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중심의에 대한 모든 강조점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Dryzek 2000: 24). 즉, 온라인 참여가 의사소통적 권력을 행정 권력으로 전환시켰는가? 이런 점에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은 대중심의가 행정적 영향력으로 전환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여기에서는 온라인 국민제안, 즉 제안마당에서 국민이 제출한 정책제안이 정책수립 과정과 정부의 실제 정책집행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즉, ICT를 이용한 국민의 정책수립에의 참여가 제도의 의사결정 관행 및 업무 절차 내용을 변화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참여의 심의성	심의적 평등
	합리성 (타당성 요구에 기반한)
	쌍방향성(의사소통의 전제조건으로서)
참여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권력에서 행정권력으로의 전환

이 두 사례의 내용 분석 결과는 appendix 1과 2를 참조하면 된다.

IV. 결 론

이 논문은 의사소통행위이론, 이상적 발화 상황, 의사소통적 권력 등 하버마스의 심의 민주주의의 이론에 사용된 주요 개념들을 도입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중심의의 토론의 질과 온라인 국민제안의 실제적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을 통해 상호이해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의 합리성 회복을 통해서만 현대사회의 병리, 즉 시장과 행정적 권력에 포로가 된 우리의 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의 후기 저작 ‘사실성과 타당성’에 등장하는 의사소통권력의 개념은 행정적 권력의 정당화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론장에서 생성되는 ‘의사소통적 권력’을 통해 매개될 때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현대사회의 병리를 치료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방법은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확대하고, 이곳에서 모든 이가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생성된 합리성과 소통적 권력이 시장과 국가의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의 의사소통 및 토론을 활성화시켜야 하며, 이는 곧 인간 이성의 해방, 사회해방의 첫걸음이다.

이 글은 온라인 심의와 국민제안이 하버마스가 제안한 심의 민주주의의 개념들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틀과 내용분석에 필요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조작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금까지 온라인 참여를 둘러싼 논의가 단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로 오프라인과 비교해 얼마나 대중의 참여를 확대시켜왔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 하버마스의 의사소통행위이론 및 의사소통적 권력의 개념들은 참여의 질 및 내용에 관한 심층연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Chambers, S. (1996). *Reasonable Democracy: Jürgen Habermas and the Politics of Discourse*.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Bohman, J. and Rehg, W. (eds.) (1999).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MA.: MIT Press.
- Brooke, C. (2002). "What does it mean to be "critical" in IS research?"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17:49-57.
- Cecez-Kecmanovic, D. and Janson, M.A. (1999). 'Communicative action theory: an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application of information systems' *The 10th Australasian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ACIS)*.(1-3 December) Wellington, New Zealand.
Available at <http://www.vuw.ac.nz/acis99/papers/PaperCecez-Kecmanovic-146.pdf>
- Dahlberg, L. (2001a). "Democracy via cyberspace: mapping the rhetorics and practices of three prominent camps";. *New Media and Society*, 3:157-177.
- _____. (2001b). "The Internet and Democratic Discourse: exploring the prospects of online deliberative forums extending the public sphere".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4:615- 633.
- Davis, R. (1999). *The Web of Politics: The Internet's Impact on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ryzek, J. S. (2000).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delman, M. (2001). *The Politics of Misinform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ster, J. (ed.) (1998).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shkin, J.S. (1991). *Democracy and Deliberation: New directions for democratic reform*.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Goldkuhl, G. (2000). "The Validity of Validity Claims: An Inquiry into Communication Rationality" in M. Schoop, C.Q., eds. (ed.) *the Fifth International Workshop on the Language-Action Perspective on Communication Modelling (LAP 2000)*. Aachen, Germany.
-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Boston: Beacon Press.
- _____.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n McCarthy, T.b.T. (ed.) *Lifeworld and System: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Cambridge: Polity Press.
- Habermas, J.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Cambridge: Polity Press.
- Hacker, K. (2002). "Network democracy, political will and the fourth world: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regarding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 and democracy". *Euricom Colloquium*

- : *Electronic Networks and Democracy*. (9-12 October), Nijmegen, The Netherlands. Available at <http://baserv.uci.kun.nl/~jankow/Euricom/papers/Hacker.pdf>
- Hague, B.N. and Loader, B.D. (1999). "Digital Democracy: Discourse and Decision Making in the Information Age". London: Routledge.
- Heng, M.S.H. and Moor, A.d. (2003). "From Habermas's communicative theory to practice on the Internet". *Information Systems Journal*: 331-352.
- Honneth, A. and Joas, H. (eds.) (1991). *CommunicativeAction: Essays on Jürgen Habermas'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Cambridge: Polity Press.
- McCarthy, T. (1984). "Translator's introduction" in Habermas, J.,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1. Boston, MA.: Beacon Press.
- Marshall, C. and Rossman, G.B. (1995).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 Mendelberg, T. and Obleske, J. (2000). "Race and Public Deliber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7:169-191.
- Outhwaite, W. (1994). *Habermas: A Critical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 _____ (1996). *The Habermas Reader*. Cambridge: Polity.
- Rehg, W. (1996). "Translator's Introduction" in Habermas, J. *BetweenFactsandNorms*. Cambridge: Polity Press.
- Spörndli, M. (2003). *Discourse quality and political decisions: an empirical analysis of debates in the German Conference Committee, Discussion Paper*. Berlin: Social Science Center Berlin(WZB).
- Sproull, L., and Kiesler, S. (1991). *Connections: New Ways of Working in the Networked Organiz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Trénel, M. (2004). "Measuring the deliberativeness of online discussions: coding scheme 2.4": Social Science Research Center.
- Valero-Silva, N. (2001). "Demystify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critical systems thinking" in Wilby, J. and Allen, J.K. (eds.) *The 45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s*. (8-13 July) Asilomar, CA.
- Westholm, H. (2003). "Adaptability" in online democratic engagement: a multi-channel strategy to enhance deliberative policies'. *Communications*. 28:205-227.
- Wilhelm, A.G. (2000). *Democracy in the Digital Age*. London: Routledge.
- Wilson, F.A. (1997). "The truth is out there: the search for emancipatory principles in information systems design". *Information Technology and People*. 10: 187-204.
- Winkler, R. (2001). "Deliberation on the Internet: talkboard discussions on the UK Parliamentary Elections 2001".

Appendix

Appendix 1. 토론마당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포럼 심의의 질

지 표		내용 분석	참여/게시 총 횟수	백분율
심의적 평 등		높은 빈도의 게시자	8/63	4.9% / 22.7%
		중간 빈도의 게시자	38/98	23.3% / 35.3%
		낮은 빈도의 게시자	117/117	71.8% / 42.1%
합 리 성	주제의 적절성	주제와 관련된 내용 (on-topic)	230	82.7%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 (off-topic)	48	17.3%
	메시지 형식	건설적인 제안	54	23.5%
		정보	34	14.8%
		공적 탄원	68	29.6%
		비생산적인 제안	74	32.2%
	타당성	타당한 내용 (Valid)	117	50.9%
		무효 (invalid)	113	49.1%
쌍 방 향 성	수평적 쌍방향성	의견제공	164	71.3%
		의견탐색	4	1.7%
		의견 통합	7	3.0%
		응답	55	23.9%
	수직적 쌍방향성	일반적인 감사	N/A	
		이해관계자의 대답	N/A	
일일평균 게시자의 수			5.5명	
일일평균 게시물의 길이			142.2단어	
일일평균 게시물 수			8.97개	

Appendix 2. 제안마당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제안의 정책적 영향력

코드 (Codes)		빈도
정책적 차원		
일반적인 행정문제		13(16.05%)
사법적 문제		3(3.70%)
교육/문화/여성		15(18.52%)
보건/복지/노동		20(24.69%)
재정/경제		3(3.70%)
산업		15(18.52%)
건설		7(8.64%)
외교 정책/군사		5(6.17%)
변화의 정도		
전적으로 채택		76(93.83%)
부분적으로 채택		5(6.17%)
영향 평가		
변화 유형		
입법 명령	법률	4(4.94%)
	법령(대통령, 부령)	12(14.81%)
규제 명령	훈령	1(1.23%)
	규칙	9(11.11%)
	공고	8(9.88%)
	지침	13(16.05%)
비공식적인 제도적 관습의 변화		13(16.05%)
공공 예산 / 자금 제공		1(1.23%)
기술적 해결		6(7.41%)
정부의 개입 / 조정		6(7.41%)
채택할 수 없음		8(9.88%)
관리자 교체		
정부 기관		76(93.83%)
사적 기업 (산업)		3(3.70%)
독립 정부 기관, 대학, 연구기관		2(2.47%)
그 외		
작성자 1		
시민		71(87.65%)
공직자		10(12.35%)
작성자 2		
개인제안		71(87.65%)
그룹제안		10(12.35%)